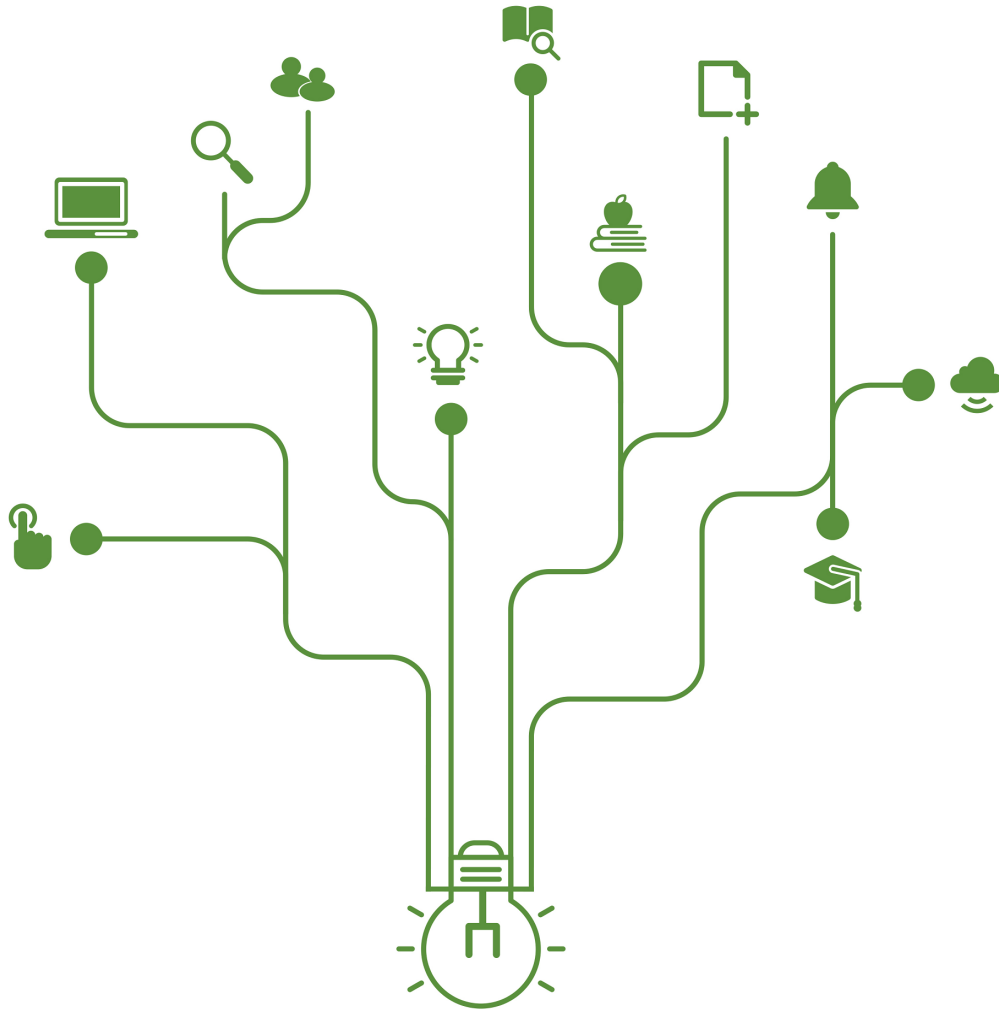


체제전환 이후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연구

최창용·김희삼



체제전환 이후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연구

최창용 · 김희삼

서론

문제 제기와 연구방법론

1. 문제 제기

체제전환은 특정 체제에서 또 다른 특정 체제로의 이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체제의 등장과 소멸, 변화를 탐색할 때 제기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과연 어떤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는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체제와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가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물질 풍요(경제자본의 축적)와 분배 외에도 사람들 간의 관계(사회자본)와 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제전환기의 경제 성장이 수반한 사회적 현상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되었던 체제전환 연구의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양적 성장'의 요인분석과 결과 탐구에 집중되었던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체제전환국의 '질적 성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및 의식구조 변화 등을 핵심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국가별, 시기별, 지역별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경제성장 및 제도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분석 대상인 체제전환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향후 남북한 통합을 대비한 정책 시 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원칙 및 방법론은 먼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지표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체제전환국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한다. 예컨대, 대인 신뢰 및 기관별 신뢰, 협동, 관용, 연대, 공공심 등

사회자본 관련 변수들, 삶의 만족도(행복도) 관련 변수,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자본 주의 관련 의식구조 변수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변수의 추이와 영향요인 분석한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구축한 Life in Transition Survey(LITS)를 활용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의 사회자본 축적과 삶의 만족도가 왜 서로 달리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추이를 추적하여 변수들의 변화 양상이 경제성장 및 제도적 요인들과의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국가별, 시기별, 지역별 비교를 시도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체제 전환국들의 유형화 가능성 검토(Inglehart-Welzel Cultural Map과의 관련성 탐구 등)를 통해 남북 통합시대를 대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제전환국에 관한 심층 연구는 북한 체제의 제도적 특수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이행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으로 축적될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행복도와 사회자본: 국제비교

세계행복보고서를 이용한 분석

1. 세계행복보고서에 포함된 체제전환국

UN은 행복과 웰빙에 관한 UN고위급회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2012년 에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이하 WHR)를 처음 발간했다. 그 후 행복은 사회진보의 적절한 척도이자 공공정책의 중심목표로 더욱 더 인식되어왔다. 급기야 2016년 6월 OECD(2016)도 고위급회의에서 사람들의 웰빙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 성장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체제전환을 이룬 나라들 역시 그러한 전환의 성패는 사람들의 행복과 웰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은 가장 최근의 세계행복보고서인 WHR 2017의 국가별 행복도 분석에 포함된 체제전환국들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동부 및 중부 유럽(CEE) 11개국(이들은 모두 EU 회원국), 남동부 유럽(SEE) 5개국, 독립국가연합(CIS) 8개국, 아시아권 2개국, 중 동 및 북아프리카(MENA) 4개국이 포함되었다. 또한 비교를 위해 지구상 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북유럽(Nordic) 지역의 5개 국가(WHR 2017 기준으로 155개국 중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5위 핀란드, 9위 스웨덴)를 함께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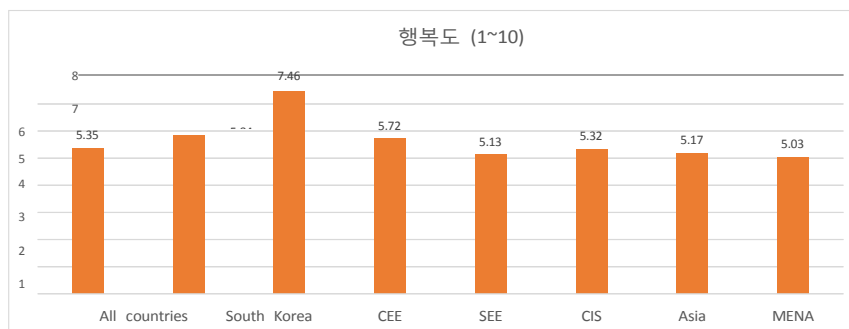
〈표 2-1〉 World Happiness Report 2017의 체제전환국과 비교대상 북유럽국

분류	지역		국가	비고
체제전환국	동유럽 및 구 소비에트 연방국가	동부 및 중부 유럽 (CEE)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11개국 (EU 회원국)
		남동부 유럽 (SEE)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알바니아	5개국
		독립국가 연합 (CIS)	(중소득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
			(저소득국)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즈 공화국, 타지키스탄	8개국
	아시아(Aisa)		베트남, 중국	2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모로코,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4개국
비교대상국	북유럽(Nordic)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5개국

주: *조지아는 2009년 탈퇴하였으나, 특성상 CIS 지역으로 분류

2. 체제전환국의 행복도 수준

세계행복보고서의 국가별 행복도는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 이하 GWP)에서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11점 척도(Cantril 사다 리형) 질문(매우 불만족=0~10=매우 만족)에 대한 그 나라 국민들의 응답을 평균한 값이다. [그림 2-1]은 WHR 2017의 국가별 행복도를 <표 2-1>에 분류된 지역군별로 단순평균(국별 인구수를 가중치로 삼지 않음)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세계 전체 국가, 한국, 북유럽 5개국의 행복도를 함께 표시했다. 역시 북유럽 5개국이 약 7.5로 가장 높은 행복도를 보였고, 한국은 세계 평균(5.4)보다 다소 높은 5.8이었다. 체제전환국들 가운데는 EU 회원국인 CEE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5.7 수준이었고, CIS가 5.3, 중국(5.273)과 베트남(5.074)을 합친 아시아 체제전환국이 5.2, SEE가 5.1, 그리고 MENA가 5.0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2-1] WHR 2017의 행복도 비교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국가별 행복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도의 구성 요인들을 <표 2-2>와 같이 제시 하고 있다. 모두 6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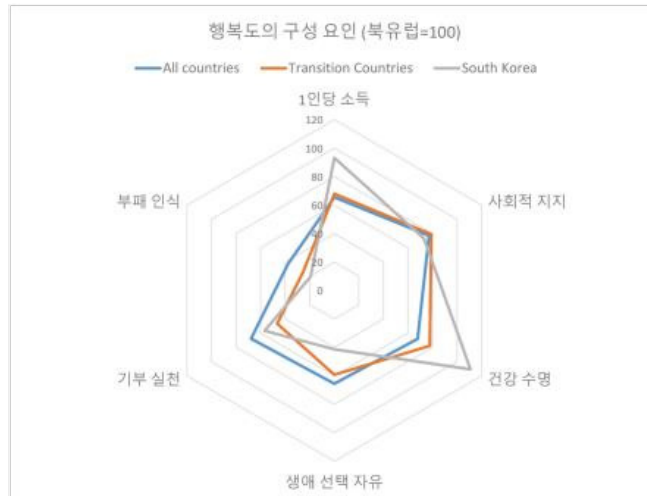
요인으로서, ① 1인당 소득(log GDP per capita),

②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③ 건강 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④ 생애 선택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 ⑤ 기부 실천 (generosity), ⑥ 부패 인식(perceptions of corruption)이다.¹⁾ 사회적 지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등과 관련된 개인의 관계형 사회자본 이라면, 부패 인식은 그 사회의 청렴도와 관련된 시스템형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생애 선택 자유는 자기의 삶과 관련된 선택에 주어 진 자유에 대한 만족감(삶의 자기주도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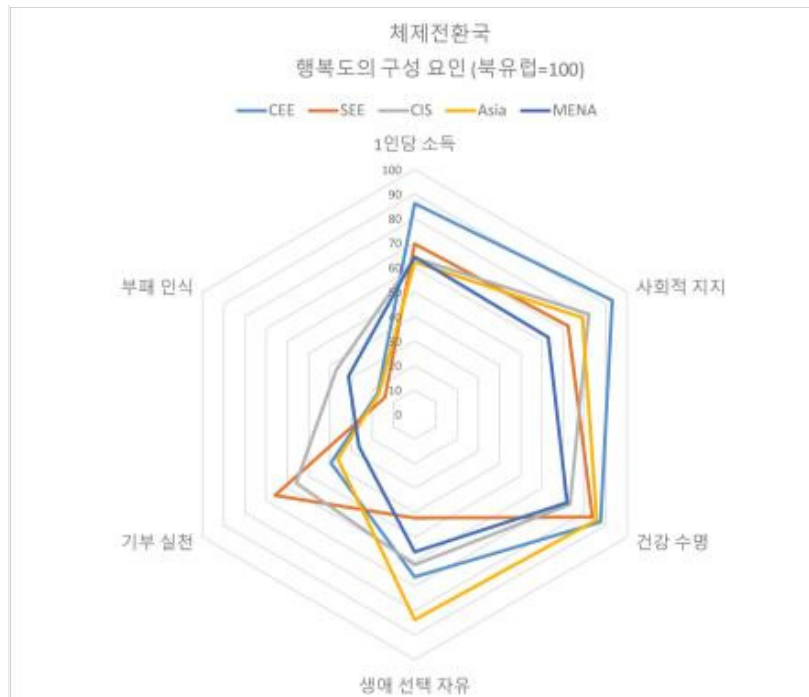
<표 2-2> WHR 2017의 행복도 구성 요인 비교

지역	행복도	행복도 구성 요인					
		1인당 소득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생애 선택 자유	기부 실천	부패 인식
전 세계 평균	5.35	0.98	1.19	0.55	0.41	0.25	0.12
체제전환국 평균	5.26	1.02	1.22	0.63	0.37	0.17	0.08
CEE	5.72	1.28	1.37	0.70	0.37	0.13	0.05
SEE	5.13	1.05	1.12	0.68	0.26	0.24	0.05
CIS	5.32	0.96	1.26	0.60	0.38	0.20	0.12
중소득 CIS	5.78	1.24	1.43	0.60	0.37	0.14	0.10
저소득 CIS	4.98	0.82	1.20	0.57	0.36	0.22	0.12
아시아	5.17	0.93	1.22	0.70	0.52	0.13	0.06
MENA	5.03	0.97	0.97	0.58	0.35	0.10	0.10
북유럽	7.46	1.50	1.54	0.81	0.62	0.36	0.33
대한민국	5.84	1.40	1.13	0.90	0.26	0.21	0.06

1) 실업률이나 소득불평등도 역시 국가별 행복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지 만 해당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 들이 많아 국제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6개 요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한다(<http://worldhappiness.report/faq/> 참조).



[그림 2-2] 체제전환국과 한국의 행복도 구성 요인 비교 (북유럽 지수=100)



[그림 2-3] 체제전환국의 권역별 행복도 구성 요인 비교 (북유럽 지수=100)

가시적 비교를 위해 [그림 2-2]에서는 행복도의 6가지 구성 요인에 대한 북유럽 5개국의 평균을 100으로 놓았을 때, 현재 체제전환국들의 상대적 값의 크기를 나타내보았다.

체제전환국들은 북유럽 5개국에 비해 행복도가 70.5% 수준인데 사회적 지지(79%)와 건강수명(77.7%)은 행복도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고, 1인당 소득(67.9%)은 행복도 차이만큼 차이나는 수준이다. 그런데 생애 선택 자유(59.2%), 기부 실천(46.5%), 특히 부패 인식(25.5%)에 있어서는 북유럽 5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삶의 자율성과 사회 차원의 시스템 적 사회자본 측면의 결핍이 행복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런 결핍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행복도가 북유럽 5개국의 78.2% 수준에 그치는

것은 1인당 소득(93.2%)이나 건강 수명 (110.8%, 한국이 매우 높은 편임)의 차이보다는 사회적 지지(73.1%), 기부 실천(56.7%), 생애 선택 자유(41.3%)의 결핍, 특히 부패 인식(19.3%)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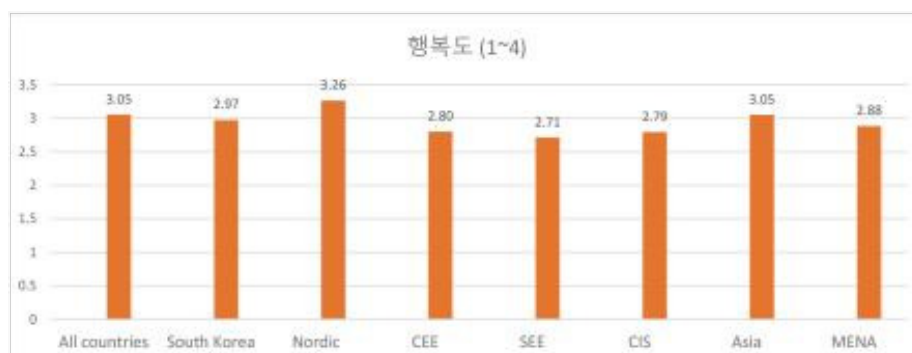
[그림 2-3]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북유럽 5개국과 행복도 구성 요인을 비교해보았다. 1인당 소득과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측면에서는 CEE가 양호한 편이고, 생애 선택 자유에 있어서는 아시아(특히 베트남)가 나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부패 인식과 기부 실천 측면에서 결핍도가 큰 편인데, 그나마 SEE의 기부 실천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MENA는 사회적 지지와 생애 선택 자유에 있어서도 다른 체제전환 국들보다 빈약함을 보였다.

세계가치관조사를 이용한 분석

세계가치관조사의 행복도와 대인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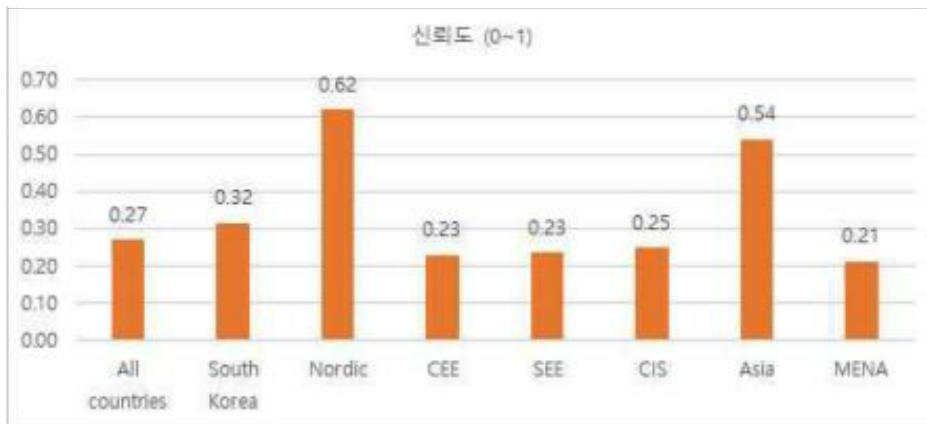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에는 각국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에 대한 4점 척도(전혀 행복하지 않음=1~4=매우 행복함) 질문을 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198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30여년을 포괄하고 있어, 각 국별로 조사 시기와 빈도, 각 설문 항목의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관심인 사회자본, 특히 대인 신뢰와 기관 신뢰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경제적 가치관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그림 2-4]는 WVS 자료에 나타난 각국 국민의 행복감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를 평균하고 체제전환국은 지역별로 묶어서 나타낸 것이다. 앞의 [그림 2-1]의 WHR 2017보다 포괄하는 국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최근 시점에서 조사한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아닌 여러 시기의 국민 행복감을 평균한 것이어서 대등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4점 척도 행복감을 기준으로 할 때도, 북유럽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나타낸다. 한국은 WVS 기준 세계 평균과 유사하며, 체제전환국들 중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국가들의 행복감은 세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 World Values Survey 1980~2014의 평균 행복도 비교

다음으로 [그림 2-5]는 WVS의 대인 신뢰(“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행복감보다 더 현격한 격차가 북유럽 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에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 에서는 대인 신뢰 비율이 세계 평균 0.27을 크게 상회하는 0.62에 달하는 반면, 체제전환국들은 WVS에서 고신뢰국으로 조사되는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면 0.2대 초중반의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 한국도 대인 신뢰 비율이 0.32에 그치며, 그나마도 1980년대부 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0.38에서 0.27 수준으로 계속 하락해온 것이 발견되고 있다(김희삼[2017]).



[그림 2-5] World Values Survey 1980~2014의 평균 대인 신뢰 비율

이제 각 조사 시점의 각국 응답자들의 행복감을 평균한 각 시점의 국 가별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핵심적인 거시경제 변수들과 체제전환국 의 체제전환이 국가 수준의 행복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자. <표 2-3>의 모형 (1)에는 1인당 실질소득과 실업률이 국가 수준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어 있는데,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행복하고 실업률이 낮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체제전환국과 그 밖의 나라들의 행복감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체제전환국이 평균적으로 4점 척도 행복감이 약 0.35점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3)은 1인당 소득과 실업률을 통제한 이후에도 체제전환국의 행복감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형 (1)에 비해 1인당 소득과 실업률, 특히 1인당 소득의 추정계수 값이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체제전환국의 낮은 행복감이 경제적 상황에서 일정부분 기인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모형 (4)는 모형 (3)에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이후 변화를 도입하여 체제전환국의 낮은 행복감이 주로 어느 시점에서 두드러졌는지를 관찰한 것이다. 교호항 변수의 추정계수 값이 드러내는 사실은 체제전환국의 행복도는 체제전환 이후에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체제전환 이후 상황이 나아진 국가들도 있고, 모형 에서 1인당 소득과 실업률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통제된 바, 경제외적 인 요인들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이다.

〈표 2-3〉 국가 수준의 행복도 결정 모형과 체제전환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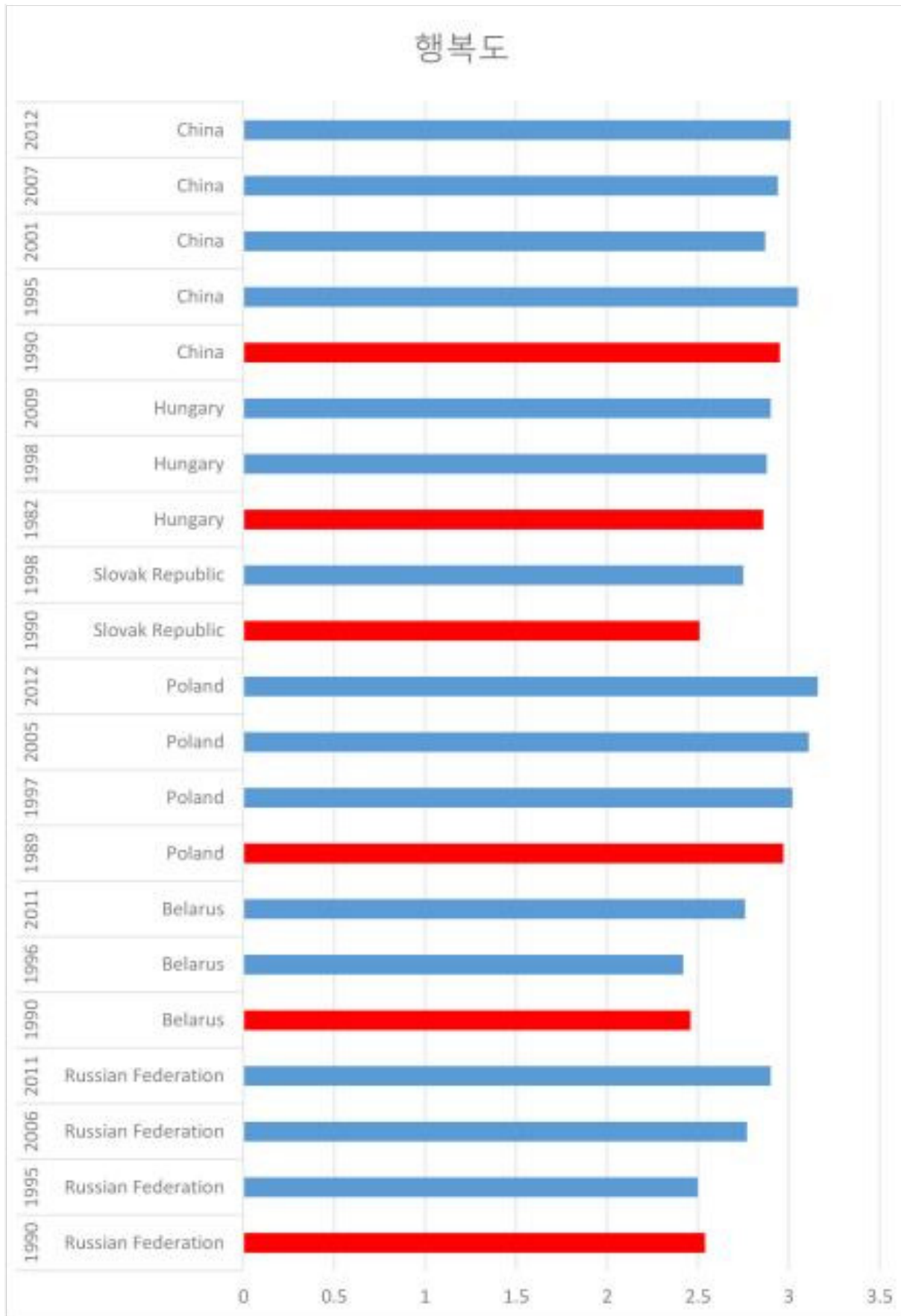
변수	(1)	(2)	(3)	(4)
1인당 실질소득	0.0559*** (0.0106)		0.0294** (0.00965)	0.0299** (0.00955)
실업률	-0.0107** (0.00331)		-0.008** (0.00287)	-0.008** (0.00284)
체제전환국		-0.354*** (0.0349)	-0.296*** (0.0361)	-0.105 (0.0925)
체제전환국*체제전환 이후				-0.209* (0.0933)
상수항	3.080*** (0.0401)	3.188*** (0.0204)	3.193*** (0.0372)	3.194*** (0.0368)
관측치 수	193	193	193	193

주: 종속변수는 행복도(1~4), 1인당 실질소득은 2010년 미국 달러 기준이며, 단위는 10,000USD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그런데 체제전환국으로 묶인 나라들도 체제전환 전후의 상황이 국가별 로 다를 수 있다. 구 사회주의권으로 분류되는 러시아와 동유럽권 및 중 국은 20세기말 시장경제로의 경제적 전환이 특징인 데 비해 중동 및 북 아프리카의 이슬람권에서는 2010년 12월 이래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 위와 혁명(이른바 ‘Arab Spring’ 또는 ‘Jasmine Revolution’)을 계기로 하 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WVS 자료에 포함된 체제전 환국들을 구 사회주의권과 MENA 지역으로 구분하여 행복도와 대인 신 퇴 비율의 체제전환 전후 추이를 각 그룹의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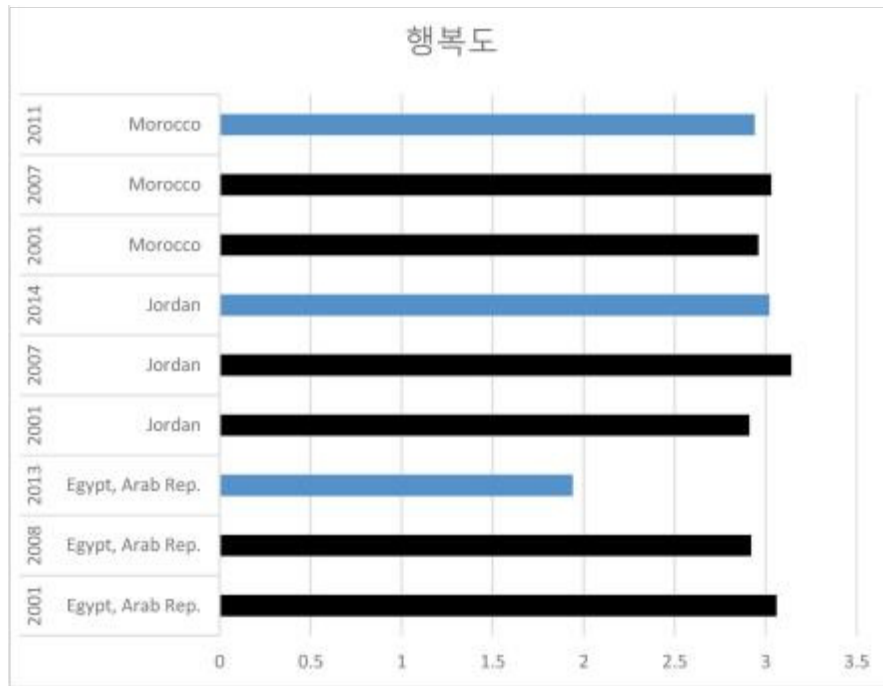
[그림 2-6]에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의 추이 를 보면,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벨라루스는 체제전환 이후 행복도가 다소간 증가한 모습이다. 중국은 행복도의 부침이 있어 체제전환 후 1995년에 상승했다가 2001년에 하락했으나 그 후 조금씩 회복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림 2-7]에서처럼 MENA 국가들은 체제전환 후에 행복도가 다소간 하락한 모습이다. 특히 이집트는 체제전환 이후 4점 척도 행복도 가 1점이나 급락했다. 결국 〈표 2-3〉에서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이후 행복도 감소가 나타난 것은 이집트 등 MENA 국가들에 의해 주도된 것 으로 보인다. 이들 MENA 국가들은 2010년대 초의 체제전환 이후 관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직후 행복도 추이와는 확실히 다른 패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6]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 변화

주: 붉은 색 막대가 체제전환 이전 시기임.



[그림 2-7]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행복도 변화

주: 검은 색 막대가 체제전환 이전 시기임.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대인 신뢰 비율과 거시경제 변수들의 관계를 <표 2-4>에서 살펴보자.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무 역, 금융, 인수합병, 기업 규모의 확대 등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 다는 연구 결과들(Knack and Keefer 1997; Algan and Cahuc 2010)을 고려 할 때 대인 신뢰 비율과 거시경제 변수들 간에는 역의 인과관계, 적어도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 2-4>의 추정 결 과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한 정도로 해석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모형 (1)에서 1인당 소득과 대인 신뢰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낸다.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고소득 선진국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게 나 타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실업률은 대인 신뢰 비율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체제전환국과 그 밖의 나라들 간에 대인 신뢰 비율의 차이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²⁾ 모형 (3)에서 거시경제 변수가 통제되자 체제전환국의 대인 신뢰 비율은 그 밖의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전환국 중 경제 적 수준은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높 은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모형 (4)에서 체제전환 이후와의 교호항을 추가했을 때 음(-)의 계수 값이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요컨대 사회적 신뢰는 고소득 국가에서 높은 경향이 있지만, 경 제적 수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짐작할 수 있다.³⁾

2) 이는 체제전환국 중 유독 대인 신뢰 비율이 높은 나라, 즉 60%대의 중국과 50% 수준의 베트남이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3)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통 사회의 가족 및 이웃 공동체 문화가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남아서 남녀노소 없 이 사람들의 고립감이 낮은 편인데, 이러한 사회문화 적 요인이 높은 대인 신뢰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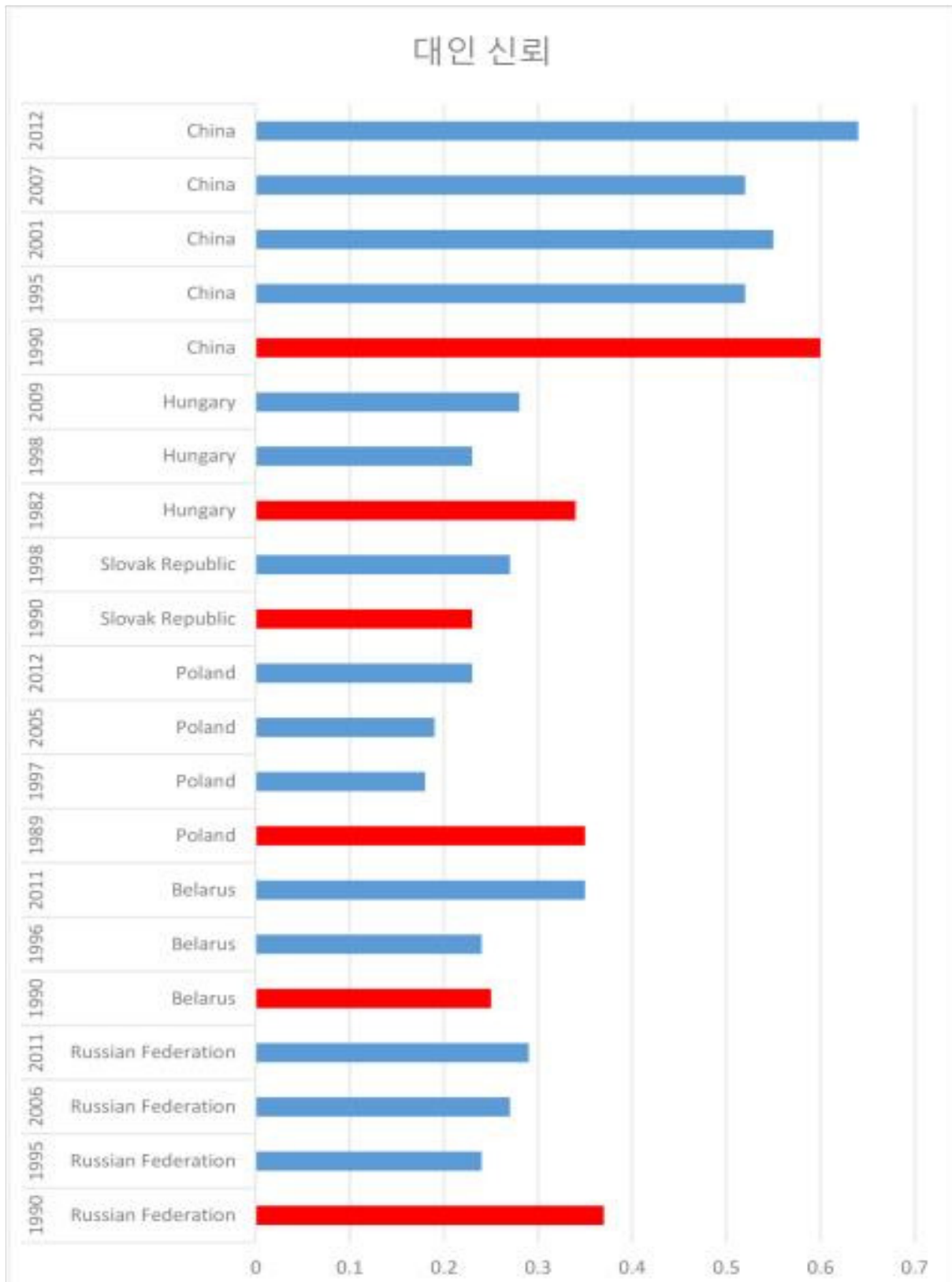
〈표 2-4〉 국가 수준의 대인 신뢰 비율 결정 모형과 체제전환의 효과

변수	(1)	(2)	(3)	(4)
1인당 소득	0.047*** (0.00533)		0.054*** (0.00550)	0.054** (0.00551)
실업률	-0.002 (0.00169)		-0.003 (0.00167)	-0.003 (0.00167)
체제전환국		-0.009 (0.0236)	0.071*** (0.0206)	0.088 (0.0535)
체제전환국*체제전환 이후				-0.019 (0.0539)
상수항	0.205*** (0.0203)	0.262*** (0.0138)	0.179*** (0.0212)	0.179*** (0.0213)
관측치 수	193	193	193	193

주: 종속변수는 대인 신뢰 비율, 1인당 실질소득은 2010년 미국 달러 기준이며 단위는 10,000USD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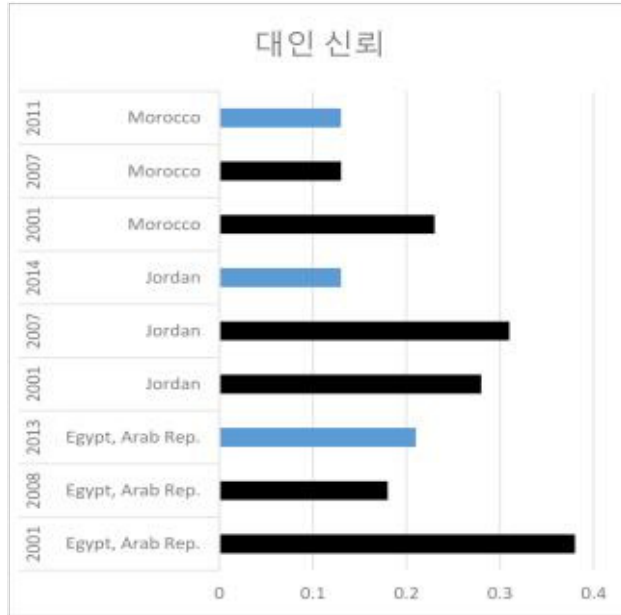
이제 다시 체제전환국들을 구 사회주의권과 MENA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인 신뢰 비율의 체제전환 전후 추이를 각 그룹의 국가별로 살펴보자. [그림 2-8]에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대인 신뢰 비율 추이를 보면,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는 체제전환 이후 대인 신뢰 비율이 급락했다가 조금씩 회복했으나 체제전환 전의 상태까지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벨라루스와 중국은 체제전환 후 하락했던 대인 신뢰 비율이 빠르게 회복되어 체제전환 전보다 조금 높아진 모습이다. 슬로바키아는 관찰 시점 간의 간격이 넓어 체제전환 후 대인 신뢰 비율이 다소 높아진 모습만 보여준다.

한편 [그림 2-9]에서 MENA 국가들을 보면 체제전환 전후로 사회가 요 동친 모습이 대인 신뢰 비율의 변이에서 드러난다. 이집트의 경우 체제 전환을 앞두고 대인 신뢰 비율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고, 모로코도 유 사한 모습이었다. 요르단은 체제 전환 후에 대인 신뢰 비율이 급락했다.



[그림 2-8]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대인 신뢰 비율 변화

주: 붉은 색 막대가 체제전환 이전 시기임.



[그림 2-9]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체제전환 전후 대인 신뢰 비율 변화

주: 검은 색 막대가 체제전환 이전 시기임.

국가별 행복도와 사회적 신뢰의 관계

국가 단위의 행복도와 사회적 신뢰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표 2-5>는 각 조사시점의 국가별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1인당 소득과 실업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에 각 시점의 국가별 대인 신뢰 비율 변수를 추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⁴⁾

1인당 소득과 실업률이 국가 단위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표2-3>의 Pooled OLS 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모형 (2)에서 국가 단위의 대인 신뢰 비율과 행복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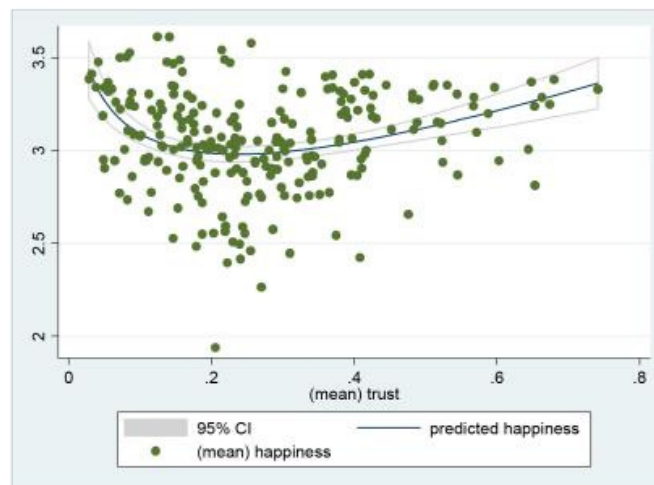
<표 2-5> 국가 단위의 행복도 결정 모형과 대인 신뢰 (확률효과 모형)

변수	(1)	(2)
1인당 소득	0.0532*** (0.0137)	0.0714*** (0.0152)
실업률	-0.0122*** (0.0037)	-0.0122*** (0.0036)
대인 신뢰		-0.4031*** (0.1586)
상수항	3.0942*** (0.0486)	3.1699*** (0.0561)
관측치 수	193	192

4) 체제전환국의 차이를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 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Hausman 검정 결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이 기각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효율적 이고 추정된 계수 값도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확률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즉 국가별 변이를 국가별로 특수한 고정효과(절편의 차이)로 보지 않고 교란항 의 일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주: 종속변수는 행복도(1~4), 1인당 실질소득은 2010년 미국 달러 기준이며, 단위는 10,000USD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행복도와 부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직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10]에서 국가 단위의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점산도를 그려보았다. 그 결과, 대인 신뢰 비율과 행복도 사이에 선형의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림에서와 같은 비선형의 곡선 모양의 관계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20% 이하의 매우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도 행복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경우가 있어 처음에는 사회적 신뢰와 행복도 간에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인 신뢰 비율이 20%대를 넘어선 수준에서는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한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물론 이 관계는 국가 단위의 신뢰와 행복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예컨대 1인당 소득)이 생략된 가운데 양자 사이의 단순 상관성을 관찰한 것에 불과하다. 가령 1인당 소득과 실업률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양자 사이에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부분의 변이가 <표 2-5>의 모형 (2)와 같은 결과를 낳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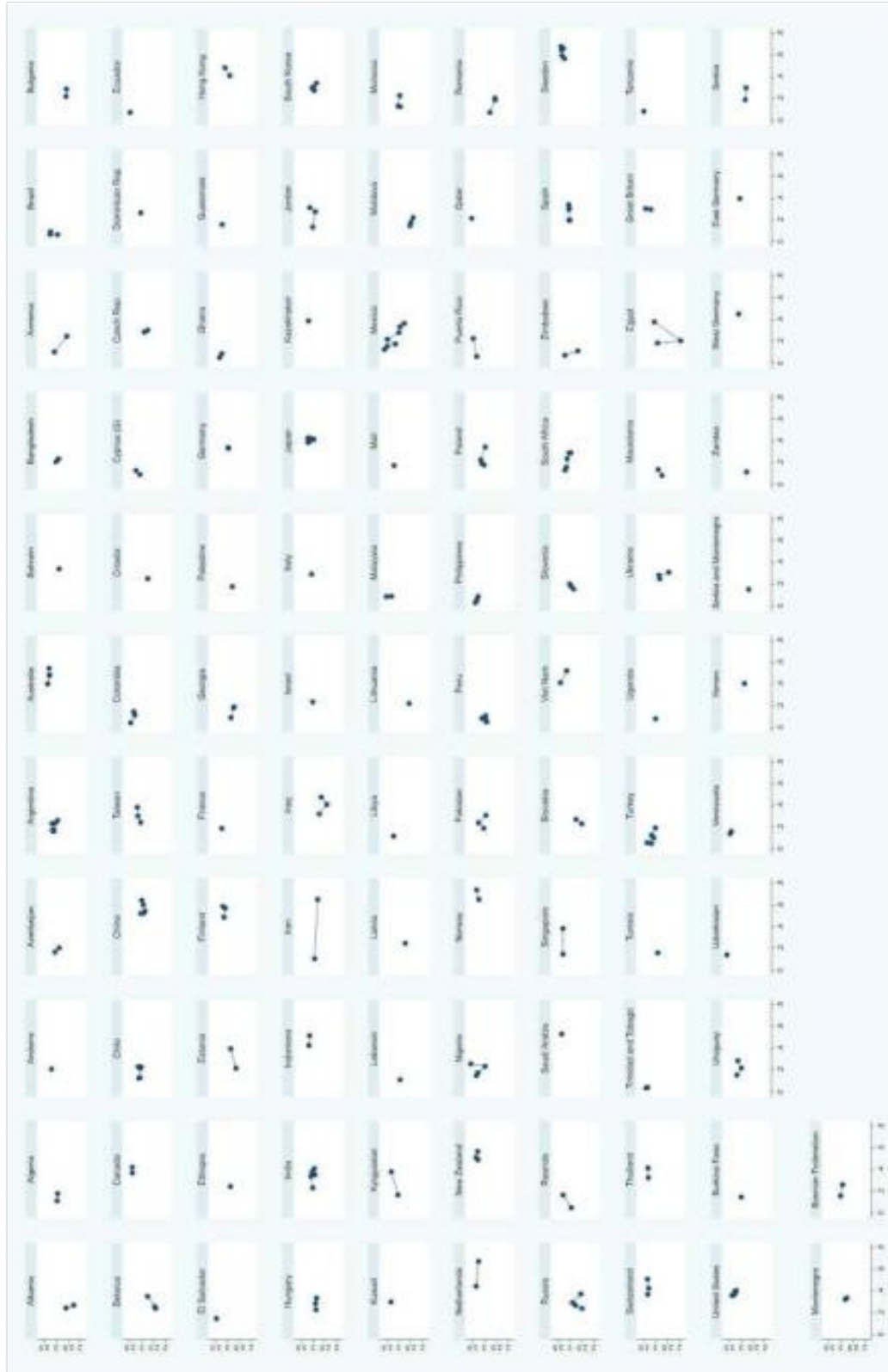
[그림 2-10] 국가 단위의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관계

위와 같은 발견은 WVS 자료에서 행복감과 대인 신뢰 변수가 조사된 모든 나라들의 국가 단위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조사 시점 간 추이를 국가별로 제시한 [그림 2-11]에서 재확인된다. 국가들 중에는 매우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값은 매우 높은 나라들(예: 아도니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가나, 과테말라, 리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추이를 보더라도 양자가 함께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예: 벨라루스, 타이완, 에스토니아, 홍콩, 키르기스스탄, 푸에르토리코, 르완다, 마케도니아 등)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예: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란, 멕시코, 루마니아, 베트남, 터키 등)도 있고, 조사 시점 간 변이가 거의 없는 경우(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도 있다.⁵⁾

5) Hausman 검정을 통해 확률효과 모형을 채택함으로써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단위의 집계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국가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결국 개인 수준으로 조사된 행복감과 대인 신뢰 변수를 몽퉁그려 국가 단위의 평균값으로 만든 집계변수를 사용한 경우, 행복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은 다 음 장에서 개인 수준의 미시 분석을 통해 이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그림 2-11] 국가별 행복도와 대인 신뢰 비율의 추이

체제전환국 주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미시분석

체제전환이 개인의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리고 이런 비경제적 요인의 변화는 국민들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장에서는 주관적 웰빙의 보편적인 척도인 전반적인 행복감과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예비적 분석

이 절에서는 분석 자료를 소개하고, 주요 변수들이 체제전환 이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1. 분석 자료

미시분석에 사용될 주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체제전환국 자료이다.

〈표 3-1〉은 WVS 1980~2014 조사에서 행복감과 사회적 신뢰 관련 항목이 체제전환 전후 시점에 모두 조사된 9개의 체제전환국의 자료 현황이다. 관찰된 시점은 앞 장의 국가별 조사 연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체제전환 전과 후의 관측치(응답자) 수만을 표에 제시했다.

〈표 3-1〉 WVS 1980~2014 조사에 체제전환 전후 시기가 포함된 국가들

번호	국가	지역	전환 전 관측치 수	전환 후 관측치 수
1	벨라루스	CIS	1,015	3,627
2	중국	Asia	1,000	6,791
3	헝가리	CEE	1,464	1,657
4	요르단	MENA	2,423	1,200
5	모로코	MENA	2,451	1,200
6	폴란드	CEE	938	3,119
7	러시아	CIS	1,961	6,573
8	슬로바키아	CEE	466	1,095
9	이집트	MENA	6,051	1,523

다음으로 〈표 3-2〉는 개별 국민 수준의 미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체제전환 전과 후의 유효 관측치 수와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국가 더미 변수들 외에 4점 척도 행복감, 나이, 성별, 최종학력, 소득수준, 결혼상태(비교대상: 이혼/별거/사별), 고용형태(비교대상: 학생/주부/은퇴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시장경제관(평등주의보다 인센티브 선호, 국영기업 보다 민영화 지지, 생계의 정부 책임보다 자기 책임지지), 사회적 신뢰(대인 신뢰 여부, 군대·언론·TV·노조·경찰·교회·정부·정당·의회·공공서비스·기업 등 기관에 대한 4점 척도 신뢰) 변수를 분석에 사용했다.

또한 국민의 행복감에 대한 국가 수준의 사회자본과 제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World Bank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World Governance Index, 이하 WGI) 자료(info.worldbank.org/governance/wgi/#doc)를 함께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와 책무성, 정치적 안정성, 법치,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의 통제라는 여섯 가지 변수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각 시점(연도)에서 개별 체제전환국의 거버넌스 질을 나타낸다. 이들 변수들이 각 체제전환국의 개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무엇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인지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 미시분석에 사용된 변수 값의 체제전환 전후 비교

변수	설명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 이후	
		관측 수	평균	관측 수	평균
헝가리	헝가리 국적(1), 기타(0)	17,814	0.08	26,891	0.06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국적(1), 기타(0)	17,814	0.03	26,891	0.04
벨라루스	벨라루스 국적(1), 기타(0)	17,814	0.06	26,891	0.13
러시아	러시아 국적(1), 기타(0)	17,814	0.11	26,891	0.24
이집트	이집트 국적(1), 기타(0)	17,814	0.34	26,891	0.06
모로코	모로코 국적(1), 기타(0)	17,814	0.14	26,891	0.04
요르단	요르단 국적(1), 기타(0)	17,814	0.14	26,891	0.04
중국	중국 국적(1), 기타(0)	17,814	0.06	26,891	0.25
행복감	전혀 행복하지 않음(1)~ 매우 행복함(4)	17,454	2.89	26,258	2.80
나이	만 나이	16,289	39.13	26,782	43.61
여성	여성(1), 남성(0)	17,758	0.53	26,785	0.54
최종학력	교육을 받지 못함(1), 초등학교 중퇴(2), 초등학교 졸업(3), 중등학교(기술/직업)중퇴(4), 중등학교(기술/직업)졸업(5), 중등학교(일반)중퇴(6), 중등학교(일반)졸업(7), 대학교 중퇴(8), 중학교 졸업(9)	10,921	4.07	26,693	5.32
소득	자가 진단 소득 분위(1~10)	15,081	4.46	24,288	4.65
기혼	기혼(1), 이혼별거사별(0)	16,299	0.69	26,712	0.68
미혼	미혼(1), 이혼별거사별(0)	16,299	0.22	26,712	0.17
상용직	상용직(1), 비경제활동(0)	16,492	0.47	25,310	0.46
단시간	단시간 근무(1), 비경제활동(0)	16,492	0.02	25,310	0.08
자영업	자영업(1), 비경제활동(0)	16,492	0.09	25,310	0.06
실업자	실업자(1), 비경제활동(0)	16,492	0.05	25,310	0.05
인센티브 차등 지향	개인노력에 인센티브 부여 필요(10) ~ 동등한 소득 지지(1)	15,812	7.24	25,164	5.47
민영화 지지	기업의 사적 소유권 증진(10)~공기업 증진(1)	15,389	4.82	22,111	4.72
개인 책임 지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함(10) ~ 정부가 시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1)	15,859	5.13	25,488	4.14

변수	설명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 이후	
		관측 수	평균	관측 수	평균
신뢰도	주의해야함(0),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음(1)	17,307	0.30	25,670	0.32
군대 신뢰	매우 신뢰(4)~ 전혀 신뢰하지 않음(1)	12,884	3.01	22,547	2.96
언론 신뢰		16,658	2.63	23,896	2.36
TV 신뢰		12,968	2.74	24,283	2.48
노조 신뢰		14,782	2.41	20,160	2.26
경찰 신뢰		12,885	2.81	24,405	2.50
교회 신뢰		14,352	3.05	22,303	2.68
정부 신뢰		7,724	2.85	24,080	2.50
정당 신뢰		10,437	2.27	23,051	2.13
의회 신뢰		13,637	2.70	23,242	2.30
공공서비스 신뢰		16,339	2.62	22,971	2.49
기업 신뢰		14,125	2.35	22,803	2.38

WGI (세계 거버넌스 지표) 변수들: 각 변수의 값이 클수록 좋은 의미

시민참여와 책무성	시민의 정치 참여, 표현 · 집회 · 언론의 자유 보장(-2.5~2.5)	5,496	-0.98	21,198	-0.69
정치적 안정성	정치 불안정 · 폭력(테러리즘 포함)에 관한 인식 (-2.5~2.5)	5,496	-0.46	21,198	-0.29
법치	법에 대한 신뢰, 계약 · 재산권 집행에 대한 질, 경찰과 재판부의 질(-2.5~2.5)	5,496	-0.05	21,198	-0.35
정부의 효과성	공공 서비스의 질에 관한 인식,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정책 입안 및 집행의 질,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2.5~2.5)	5,496	-0.19	21,198	-0.12
규제의 질	정부의 정책 · 규제 집행능력에 대한 인식, 민간 부문 발전(-2.5~2.5)	5,496	-0.08	21,198	-0.17
부패의 통제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2.5~2.5)	5,496	-0.45	21,198	-0.38

2. 주요 변수의 체제전환 후 추이

먼저 행복도, 시장경제관, 사회자본 및 거버넌스 관련 변수들이 각 체제전환국 내에서 체제전환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보자. 이들 각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체제전환 이후의 시점을 나타내는 터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국가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을 통해 동일 국가 내에서 각 변수별로 체제전환 후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모아서 정리한 <표 3-3>에 의하면, 체제전환 후에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1) 국민들의 행복감이 체제전환 전보다 감소했다.
- (2) 시장경제적인 인센티브, 민영화, 자기책임에 대한 지지가 감소했다.
- (3)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 (4) 군대를 제외하고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신뢰 역시 하락하여, 언론, TV, 노조, 경찰, 종교기관, 정당, 의회, 공공서비스, 기업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
- (5) 시민 참여와 책무성은 높아졌다.
- (6) 정치적 안정성은 크게 하락했고, 법치,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도 낮아졌다.
- (7) 부패 관리는 개선되었다.

요컨대 체제전환국에서 국민들의 행복감과 사회자본, 거버넌스의 질이 체제전환 후에 대체적으로 악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적인 경쟁, 자유, 자기책임의 원리에 대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도 나빠졌다. 그런데 체제전환 후의 경제사회 변화는 같은 나라에서도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변화의 격랑에서 이익을 얻는 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제 한 체제전환국 내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행복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차례이다.

〈표 3-3〉 행복도, 시장경제관, 사회자본, 거버넌스 변수의 체제전환 후 증감

종속변수	체제전환 후	t값	관측치 수
행복도	-0.1018013	-12.65	43,712
동기부여 지지	-1.784771	-49.76	40,976
민영화 지지	-0.289832	-8.17	37,500
자기책임 지지	-2.424332	-72.44	41,347
대인 신뢰	-0.0735397	-14.36	42,977
군대 신뢰	0.0306896	2.85	35,431
언론 신뢰	-0.254457	-24.81	40,554
TV 신뢰	-0.2128549	-17.40	37,251
노조 신뢰	-0.1608951	-14.75	34,942
경찰 신뢰	-0.052636	-4.98	37,290
교회 신뢰	-0.1656695	-15.07	36,655
정부 신뢰	-0.3585645	-21.93	31,804
정당 신뢰	-0.2679415	-24.01	33,488
의회 신뢰	-0.5219151	-50.18	36,879
공공서비스 신뢰	-0.1775081	-17.60	39,310
기업 신뢰	-0.0243597	-2.27	36,928
시민 참여와 책무성	0.052182	15.40	26,543
정치적 안정성	-0.5531722	-127.09	26,543
법치	-0.1910335	-75.91	26,543
정부의 효과성	-0.2591363	-78.47	26,543
규제의 질	-0.2448206	-157.65	26,543
부패의 통제	0.0178715	8.18	26,543

체제전환국 주민의 행복

1. 체제전환과 인적 특성의 영향

〈표 3-4〉는 개인 수준의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 체제전환 후의 시점 더미, 체제전환국 국가 더미(비교대상: 중국)와 함께 인적 특성 변수들이 포함된 행복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비교를 위해 모형 (1)에는 인적 특성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인적 특성이 포함 된 모형 (2)와 정성적인 결과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⁶⁾

국가 수준의 평균적인 행복도 차이를 국가 더미를 통제한 후에도 체제 전환 후에 국민들의 행복감은 평균 0.7점 남짓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4점 척도로 측정된 행복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낙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체제전환국 국민들 중에는 중국 국민이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이집트 국민들이 가장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2)에 나타난 체제전환국가 국민들의 인적 특성별 행복감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연령 상승에 따른 행복감의 꺾이는 U자형(또는 스마일 입모양)인 데, 나이에 관한 2차 함수 형태로 추정된 계수값으로 계산해보면 젊어서 높던 행복감이 50대 중반(56세 무렵)에 최저가 되고 그 후 다시 상승한다.
- (2)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행복하다.
- (3) 소득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
- (4)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미혼보다 행복하고, 미혼이 이혼·별거·사 별보다는 행복하다.
- (5) 실업자는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학생·주부·은퇴자)보다 불행하다.

위와 같은 발견은 체제전환국 국민들이 아닌 서구 선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정된 행복 모형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사항들이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조건의 보편성을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6) 이하의 행복 모형 분석에서도 설명변수의 포괄 범위를 달리하며 체제전환 이후 더미변 수의 추정계수 값의 크기가 새로 포함된 설명변수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것인데, 일관된 표본을 이용한 비교를 위해 〈표 3-3〉에 열거된 변수들의 결측값이 없는 18,114개의 관측치로 분석 표본을 한정했음을 밝혀둔다.

〈표 3-4〉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행복과 인적 특성의 관계

변수	(1)	(2)
체제전환 이후	-0.724*** (0.0185)	-0.737*** (0.0182)
헝가리	-0.157*** (0.0253)	-0.108*** (0.0247)
슬로바키아	-0.314*** (0.0261)	-0.300*** (0.0254)
벨라루스	-0.484*** (0.0164)	-0.539*** (0.0165)
러시아	-0.158*** (0.0190)	-0.141*** (0.0189)
이집트	-0.960*** (0.0191)	-0.957*** (0.0193)
모로코	-0.470*** (0.0233)	-0.471*** (0.0246)
요르단	-0.0564* (0.0227)	-0.118*** (0.0227)
나이		-0.0194*** (0.00208)
나이 제곱		0.000174*** (0.0000221)
여성		0.0474*** (0.0110)
학력		0.0143*** (0.00227)
소득		0.0531*** (0.00269)
기혼		0.218*** (0.0159)
미혼		0.0877*** (0.0222)
상용직		-0.0201 (0.0137)
단시간		-0.0369 (0.0218)
자영업		0.0161 (0.0247)
실업자		-0.160*** (0.0244)
상수항	3.791*** (0.0213)	3.798*** (0.0557)
관측치 수	18,114	18,114

주: 종속변수는 행복도(1~4),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2. 체제전환과 인적 특성, 시장경제관, 신뢰, 거버넌스의 영향

다음으로 〈표 3-5〉는 〈표 3-4〉의 행복 모형 (2)에 시장경제관 변수와 대인 신뢰 변수 및 거버넌스 지표 변수들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투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추가된 설명변수들이 행복 감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도 관심 대상이지만, 체제전환 이후의 행복 감 하락을 추가된 변수들이 얼마나 설명해주는지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일단 〈표 3-5〉의 모형 (3)에는 WVS에서 개인 단위로 조사된 시장경제 관 변수와 대인 신뢰 변수를 추가한 결과를 제시했다. 체제전환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가 모형 (1), (2)에서보다는 절댓값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다. 시장경제관 관련 변수들을 보면, 평등보다 차등적 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람,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 생계의 자기 책임을 강 조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전환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핵심적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관이 뚜렷한 사람이 체제전환국에서 행복한 것으로 드러난 결과는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이들이 체제전환 과정의 수혜자이자 승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대인 신뢰가 높으면 친구 관계 등 사회적 연결망도 더 양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신 건강이 행복감과 직결된다는 상식과 인간관계도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생각한다면, 신뢰와 행복의 양 (+)의 상관성은 역의 인과성을 일부 포함(즉,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잘 믿는다)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데,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끝으로 <표 3-5>의 모형 (4)는 모형 (3)의 설명변수들에 더해 각 시점 (조사 연도)에 해당되는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지표 변수들이 추가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이제 체제전환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 값이 -0.176에 불과해 절댓값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체제전환 후의 행복감 하락이 거버넌스 지표의 변화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지표 들이 국가 더미 변수와도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국가별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 값도 상당히 움직였다.

거버넌스 지표 변수들 각각이 체제전환국 국민의 행복감과 갖는 상관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⁷⁾

체제전환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정치적 안정 성과 법치는 주민들의 안정감과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체제전환국에서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의 통제는 주민 들의 행복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언뜻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정부, 질이 높은 규제, 부패의 관리는 유능하고 합리적이며 청렴한 정부 를 의미하기에 주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정부가 체제전환국의 정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기능적으로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거버넌스 지표 측면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기득 권의 균열 속에 개인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빈틈이 열리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주민들의 행복감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작 주민들의 행복감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기능적인 유능함보다는 거버넌스의 원초적인 본질에 가까운 정치적 안정성(폭 력 부재 포함)과 법치를 통해 격변기의 혼란과 무질서가 극한으로 치달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체제전환국 정부가 주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정책의 목표를 둔다면, 그 우선순위는 기능적 측면의 정부역할 강화보다는 본질적 측면의 통치 거버넌스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7) '시민 참여와 책무성' 변수는 일부 국가 더미 변수와 다중공선성을 일으켜 제외되었다.

〈표 3-5〉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행복과 시장경제관, 신뢰 및 거버넌스 질의 관계

변수	(3)	(4)
체제전환 이후	-0.699*** (0.0184)	-0.176*** (0.0295)
헝가리	-0.0713** (0.0246)	-0.261*** (0.0549)
슬로바키아	-0.270*** (0.0254)	-0.545*** (0.0978)
벨라루스	-0.516*** (0.0167)	-1.411*** (0.175)
러시아	-0.0546** (0.0195)	-0.893*** (0.140)
이집트	-0.898*** (0.0196)	-1.980*** (0.330)
모로코	-0.406*** (0.0250)	-0.697*** (0.155)
요르단	-0.104*** (0.0230)	-1.108** (0.391)
나이	-0.0192*** (0.00207)	-0.0193*** (0.00202)
나이 제공	0.000174*** (0.0000219)	0.000171*** (0.0000214)
여성	0.0509*** (0.0109)	0.0560*** (0.0107)
학력	0.0122*** (0.00226)	0.00495* (0.00222)
소득	0.0478*** (0.00269)	0.0588*** (0.00266)
기혼	0.216*** (0.0158)	0.230*** (0.0154)
미혼	0.0827*** (0.0220)	0.0801*** (0.0215)
상용직	-0.0233 (0.0136)	-0.0197 (0.0133)
단시간	-0.0345 (0.0217)	-0.0200 (0.0213)
자영업	0.00734 (0.0246)	-0.00522 (0.0240)
실업자	-0.153*** (0.0243)	-0.137*** (0.0237)
동기부여 지지	0.0231*** (0.00179)	0.0211*** (0.00179)
민영화 지지	0.00648*** (0.00187)	0.00522** (0.00183)
자기책임 지지	0.00759*** (0.00197)	0.00498** (0.00192)
대인 신뢰	0.102*** (0.0114)	0.112*** (0.0114)
정치적 안정성		0.339*** (0.0949)
법치		2.246*** (0.585)
정부의 효과성		-1.006*** (0.135)
규제의 질		-0.929** (0.346)
부패의 통제		-1.403*** (0.161)
상수항	3.542*** (0.0576)	3.547*** (0.149)
관측치 수	18,114	18,114

주: 종속변수는 행복도(1~4),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체제전환국 주민의 행복 도에 관한 <표 3-4>와 <표 3-5>의 분석 결과에서 체제전환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MENA 국가들에 의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앞의 [그림 2-6]과 [그림 2-7]에서도 짐작할 수 있었던 점이지만, 분석 표본을 MENA 국가들과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해 봄으로써도 확인되었다.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의 그룹에서는 체제전환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뚜렷한 음(-)의 부호를 나타낸 데 비해, 후자의 그룹에서는 해당 변수가 다중공선성 문제로 추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행복도에 대한 인적 특성, 시장경제관 및 신뢰가 미치는 영향은 MENA 국가들과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두 그룹 모두 정성적으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거버넌스 관련 변수들은 그룹별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 더미변수를 통제하면서 두 그룹을 묶어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체제전환국 주민의 사회적 신뢰

이 절에서는 사회자본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체제전환국 주민들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높은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으며, 각 거버넌스 지표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또 한대인 신뢰 및 기관·조직 신뢰가 체제전환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인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에서 다시 분석해본다. 인적 특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체제전환 후 증가한 사회적 불신의 구체적인 양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대인 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

<표 3-6>은 체제전환국 주민의 대인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에 대한 이진(0/1) 응답이므로 선형확률모형(OLS)을 사용하는 대신 프로빗(probit) 모형 또는 이항 로짓(logit)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로 계산한 한계효과를 함께 제시했다.

참고로 표에서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더미 변수(비교대상: 중국)들만 설명변수로 넣거나 인적 특성 변수까지 통제하여 국가 간차 이를 비교한 결과는, 체제전환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대인 신뢰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표 3-6>에서처럼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지표 변수들까지 설명변수로 추가하자, 헝가리의 대인 신뢰가 개선되어 비교대상인 중국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즉, 헝가리에서 주민들의 대인 신뢰를 낮추는 요인은 국가적 거버넌스의 수준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적 특성의 영향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대인 신뢰가 높았고, 실업자는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대인 신뢰가 낮았다.

한편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지표 변수들을 보면, 시민 참여와 책무성, 정치적 안정성, 법치 등 본질적 변수들은 주민의 대인 신뢰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정부의 효과성, 규제질, 부패의 통제 등기 능적 변수들은 주민의 대인 신뢰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들

거버넌스 지표 변수와 주민의 행복감 사이에 나타났던 본질과 기능의 대 비가 주민의 대인 신뢰 측면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정부의 기능적 측면의 개선에 주력하기보다는 거버넌스의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6〉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대인 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

변수	(1) OLS		(2) Probit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z값
헝가리	0.5770383	4.40	0.5259633	3.48
슬로바키아	-1.069822	-3.61	-0.3010394	-2.65
벨라루스	-2.949519	-4.66	-0.6755573	-3.63
러시아	-1.273716	-4.38	-0.4659486	-3.32
이집트	-1.15733	-6.74	-0.4999231	-5.54
모로코	-1.020982	-6.56	-0.364493	-5.50
요르단	-0.1222166	-0.81	-0.1748556	-1.38
나이	0.0011685	4.99	0.0012475	4.97
여성	0.0079997	1.28	0.008185	1.22
학력	0.0032739	2.43	0.0032265	2.21
소득	0.0053131	3.42	0.0057952	3.46
기혼	0.000569	0.06	-0.000412	-0.04
미혼	0.028493	2.28	0.0303801	2.22
상용직	0.0001549	0.02	0.0009579	0.12
단시간	0.0005557	0.04	0.0008726	0.07
자영업	0.0054218	0.39	0.0038557	0.25
실업자	-0.0332511	-2.35	-0.0351537	-2.31
시민 참여와 책무성	0.4927107	2.79	0.3635486	1.97
정치적 안정성	0.8030152	3.81	0.6291218	2.88
법치	0.2350308	3.12	0.2475425	3.07
정부의 효과성	-0.5304077	-4.91	-0.4433951	-3.99
규제의 질	-1.765876	-4.83	-1.441264	-3.82
부패의 통제	-0.793753	-3.32	-0.6056974	-2.42
상수항	1.155372	5.84	-	-

주: 종속변수는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여부, 비교 대상 국가는 중국, 관측 치 수는 22,010임.

2. 체제전환 후 사회적 신뢰의 변화와 인적 특성의 영향

앞서 예비 분석에서 대인 신뢰와 기관·조직 신뢰가 체제전환 후에 대 체로 하락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인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체제전환 이후 각 영역에서 사회적 신뢰의 증감을 살펴보자.⁸⁾ 아울러 인적 특성이 각 기관과 조직에 대한 신뢰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관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찰되지 않은 시간불변적인 국가별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들을 <표 3-7>에 사회적 신뢰의 대상별로 차례로 풀어놓았다.

대인 신뢰는 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체제전환 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 특성의 영향은 <표 3-6>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군대에 대한 신뢰는 인적 특성이 통제된 모형에서는 체제전환 전후의 차이가 없었다. 고령자, 남성, 저학력자, 저소득자, 기혼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군대 신뢰가 높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언론에 대한 신뢰는 체제전환 후에 크게 하락했다.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실업자의 언론 신뢰가 높고, 이혼·별거·사별자와 자영업자의 언론 신뢰가 낮았다.

TV에 대한 신뢰 역시 체제전환 후에 상당 폭 하락했다.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저소득자, 기혼자, 비경제활동인구의 TV 신뢰가 높았다. TV의 주 시청자층으로 예상되는 집단이 TV의 내용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 체제전환 후에 크게 하락했다.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고소득자, 미혼자, 근로자의 노조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찰에 대한 신뢰 역시 체제전환 후에 폭락했다.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찰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는 체제전환 후에 기관 신뢰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4점 척도에서 0.8점 하락).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고소득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종교기관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체제전환 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의 정부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영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근로자와 실업자보다 정부를 더 믿었다.

정당에 대한 신뢰도 체제전환 후 크게 하락했다.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고소득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정당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회에 대한 신뢰는 체제전환 후 종교기관에 이어 두 번째로 폭락했다.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미혼자의 의회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실업자의 의회 신뢰가 낮았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체제전환 후 상당 폭 낮아졌다.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고소득자, 미혼자의 공공 서비스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끝으로 회사(기업)에 대한 신뢰는 체제전환 후에 변화가 없었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유일하게 신뢰의 추락이 발견되지 않은 대상이 기업인 것을 보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중추적 존재가 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신뢰가 상승한 것은 아닌 만큼 상세요인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성과 고소득자의 기업 신뢰가

8) 예비 분석과 인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분석의 결과 차이가 인적 특성 변수가 누락된 관 측치의 탈락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높았고, 자영업자는 (기업과의 경쟁, 즉 이해관계 상충에 기인한 것인지) 피고용자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이렇듯 체제전환 과정은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손익이 갈리는 변화들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는 평균적으로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표 3-7〉 체제전환 후 사회적 신뢰의 변화와 인적 특성의 영향

가. 대인 신뢰 (n=30,712)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0797905	-8.89
나이	0.0014279	6.90
여성	0.006688	1.21
학력	0.0018335	1.58
소득	0.003972	3.17
기혼	0.0035103	0.43
미혼	0.0353629	3.16
상용직	0.0074148	1.13
단시간	0.0171628	1.57
자영업	0.0283921	2.46
실업자	-0.0106178	-0.91
상수항	0.2578524	13.88

나. 군대 신뢰 (n=24,583)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0289669	1.27
나이	0.0049868	11.93
여성	-0.039577	-3.66
학력	-0.0176684	-7.27
소득	-0.0133461	-5.28
기혼	0.030086	1.86
미혼	0.0256414	1.17
상용직	-0.0593067	-4.54
단시간	-0.0623854	-2.83
자영업	-0.0608283	-2.65
실업자	-0.0433329	-1.90
상수항	2.931236	74.51

다. 언론 신뢰 (n=28,599)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3736127	-22.19
나이	0.0028145	7.16
여성	0.0214223	2.03
학력	-0.0141959	-6.40
소득	-0.0013167	-0.55
기혼	0.0282908	1.83
미혼	0.0581826	2.76
상용직	-0.0066563	-0.54
단시간	0.0018334	0.08
자영업	-0.0561637	-2.47
실업자	0.0405545	1.86
상수항	2.637136	74.99

라. TV 신뢰 (n=29,304)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2255492	-13.57
나이	0.0011457	2.96
여성	0.0717862	6.89
학력	-0.0299179	-13.67
소득	-0.0055718	-2.37
기혼	0.0280666	1.84
미혼	0.0119849	0.58
상용직	-0.0368944	-3.03
단시간	-0.0002373	-0.01
자영업	-0.1325809	-5.95
실업자	-0.0450424	-2.09
상수항	2.821872	81.60

마. 노동조합 신뢰 (n=24,348)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3786015	-19.56
나이	0.0035555	7.70
여성	0.0714754	5.78
학력	-0.0155796	-6.01
소득	0.0139621	5.02
기혼	0.0027706	0.15
미혼	0.0759069	3.10
상용직	0.0486908	3.38
단시간	0.0742382	2.90
자영업	-0.0182525	-0.68
실업자	0.0187464	0.73
상수항	2.373719	57.85

바. 경찰 신뢰 (n=26,383)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4180314	-22.67
나이	0.0034006	7.86
여성	0.0758557	6.66
학력	-0.0188427	-7.56
소득	-0.0018134	-0.69
기혼	0.0097587	0.58
미혼	0.0202987	0.89
상용직	-0.0077771	-0.57
단시간	-0.0521255	-2.32
자영업	-0.0092751	-0.39
실업자	-0.1124747	-4.73
상수항	2.881334	73.02

사. 종교기관 신뢰 (n=24,701)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7664106	-40.20
나이	0.0009574	2.08
여성	0.1089966	8.91
학력	-0.0381089	-14.35
소득	0.0133009	4.72
기혼	0.0019851	0.11
미혼	-0.0138852	-0.58
상용직	-0.0932901	-6.39
단시간	-0.0625498	-2.58
자영업	-0.1100489	-4.41
실업자	-0.0757474	-2.99
상수항	3.550561	85.44

아. 정부 신뢰 (n=25,801)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4213158	-22.45
나이	0.0033065	7.51
여성	0.0632066	5.48
학력	-0.0291747	-11.54
소득	-0.0025352	-0.95
기혼	0.0207038	1.21
미혼	0.0191631	0.82
상용직	-0.0301541	-2.17
단시간	-0.0570692	-2.51
자영업	-0.0113127	-0.47
실업자	-0.0996154	-4.09
상수항	2.887733	71.50

자. 정당 신뢰 (n=24,423)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3767604	-20.42
나이	0.0022368	5.23
여성	0.0276438	2.48
학력	-0.0129136	-5.27
소득	0.0060889	2.35
기혼	0.0185901	1.12
미혼	0.0374256	1.67
상용직	-0.0168908	-1.26
단시간	-0.0124918	-0.57
자영업	-0.0494396	-2.12
실업자	-0.0644637	-2.72
상수항	2.376458	60.16

차. 의회 신뢰 (n=25,208)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6477856	-34.79
나이	0.0022655	5.15
여성	0.0456154	3.96
학력	-0.0198948	-7.89
소득	0.0031281	1.18
기혼	0.0266997	1.55
미혼	0.0405437	1.74
상용직	-0.0158491	-1.15
단시간	-0.018713	-0.82
자영업	-0.0037428	-0.16
실업자	-0.0622502	-2.57
상수항	2.819001	70.26

카. 공공 서비스 신뢰 (n=27,753)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4086828	-23.36
나이	0.0028756	6.95
여성	0.0386439	3.48
학력	-0.012841	-5.53
소득	0.0044422	1.77
기혼	0.0227838	1.40
미혼	0.0555748	2.51
상용직	0.0131751	1.02
단시간	0.0238595	1.05
자영업	-0.0073831	-0.31
실업자	-0.0302656	-1.31
상수항	2.692124	73.13

타. 회사 신뢰 (n=27,249)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0129514	0.72
나이	-0.0000422	-0.10
여성	0.0231622	2.06
학력	0.002921	1.23
소득	0.0161099	6.28
기혼	0.0097139	0.57
미혼	0.0353048	1.55
상용직	0.0136809	1.03
단시간	0.0123187	0.54
자영업	-0.0470227	-1.99
실업자	-0.0216009	-0.92
상수항	2.222544	58.65

〈표 3-8〉 체제전환 후 시장경제관의 변화와 인적 특성의 영향

가. 평등보다 인센티브에 의한 차등 지향 (n=30,367)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1.932217	-31.96
나이	-0.0104396	-7.64
여성	-0.1552412	-4.26
학력	0.0149756	1.95
소득	0.2192446	26.55
기혼	0.1103723	2.03
미혼	0.0088535	0.12
상용직	0.0757943	1.76
단시간	-0.2758766	-3.80
자영업	0.2742267	3.57
실업자	0.233935	3.05
상수항	6.617985	53.97

나. 기업의 국유화보다 민영화 지향 (n=27,616)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1476395	-2.54
나이	-0.0149621	-11.11
여성	-0.1393694	-3.86
학력	0.1156436	15.45
소득	0.0628696	7.65
기혼	0.0223735	0.42
미혼	0.1490098	2.05
상용직	0.04741	1.12
단시간	0.2553191	3.53
자영업	0.5693183	7.56
실업자	-0.0207334	-0.28
상수항	4.448478	37.05

다. 생계에 대해 국가 책임보다 개인 책임 우선 (n=30,606)

변수	추정계수	t값
체제전환 이후	-0.2523608	-4.51
나이	-0.0094608	-7.47
여성	-0.07869	-2.33
학력	0.0530315	7.45
소득	0.1382249	18.03
기혼	0.0011923	0.02
미혼	0.0989625	1.45
상용직	0.1233065	3.10
단시간	0.1503202	2.22
자영업	0.3466012	4.85
실업자	0.0128102	0.18
상수항	3.606027	31.72

체제전환국 주민의 시장경제적 가치관

시장경제의 도입과 확산을 중요한 부분으로 하는 체제전환 과정은 주 민들의 시장경제와 관련된 가치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시장경 제적 경쟁원리와 개인주의적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이 체제전 환의 옹호자이자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러한 가치관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짚어질수록 체제전환 후에 행복감이 높았을 것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즉, 변화의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많아졌을수록 체제전환 후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표 3-8>에서 시장경제적 가치관 변수들의 체제전환 후 변화를 보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예비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결과와 동일하게, 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국가 고정효과 모형 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체제전환 후에 시장경제적 가치관에 대한 지지도 는 하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평등보다 인센티브에 의한 차등을 지향하는 견해는 체제전환 후 10점척도 변수가 약 2점 하락하여 크게 약화된 모습이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 특성을 보면, 고령자와 여성이 차등을 싫어했고, 고학력자, 고소득자, 기혼자가 차등을 지지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가 단시간근로자 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인센티브에 의한 차등을 지지했다.

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지지도 역시 체제전환 후에 낮아졌다. 고령자와 여성이 민영화를 덜 지지했고, 고학력자, 고소득자, 미혼자가 민영화를 더 지지했다. 시간제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민영화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개인의 생계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 관련 응답은 국가 책임 보다 자기 책임이 우선이라는 견해도 체제전환 후에 약화되었다. 고령자 와 여성이 자기 책임 우선주의를 덜 지지했고, 고학력자, 고소득자, 취업 자가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보다 자기 책임을 더 지지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에 맞는 가치관을 드러낸 셈이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체제전환국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제성장을 중심 의 양적 변화를 추적한데 비해 ‘행복’과 ‘신뢰’라는 ‘주관적 변수’의 변화를 추적했다. ‘행복’은 물질 풍요(경제자본의 축적)와 분배 외에도 사람들 간의 관계(사회자본)와 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제전환기의 경제성장이 수반한 사회적 현상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되었던 체제전환 연구 의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양적 성장’의 요인분석과 결과 탐구에 집중되었던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체제전환국의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주요 자료로는 체제전환국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했고, 특히 대인 신뢰 및 기관별 신뢰, 협동, 관용, 연대, 공공심 등 사회자본 관련 변수들, 삶의 만족도(행복도) 관련 변수,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관련 의식구조 변수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변수의 추이와 영향요인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체제전환국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구축한 Life in Transition Survey(LITS)를 활용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의 사회자본 축적과 삶의 만족도가 왜 서로 달리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들은 북유럽 5개국에 비해 행복도가 70.5% 수준인데 사회적 지지(79%)와 건강 수명(77.7%)은 행복도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고, 1인당 소득(67.9%)은 행복도 차이만큼 차이나는 수준이다. 그런데 생애 선택 자유(59.2%), 기부 실천(46.5%), 특히 부패 인식(25.5%)에 있어서는 북유럽 5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삶의 자율성과 사회 차원의 시스템적 사회자본 축적의 결핍이 행복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감보다 더 현격한 격차가 북유럽 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에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인 신뢰 비율이 세계 평균 0.27을 크게 상회하는 0.62에 달하는 반면, 체제전환국들은 WVS에서 고신뢰국으로 조사되는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면 0.2대 초 중반의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도 대인 신뢰 비율이 0.32에 그치며, 그나마도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0.38에서 0.27 수준으로 계속 하락해온 것이 발견되고 있다.

셋째, 체제전환국과 그 밖의 나라들 간에 대인 신뢰 비율의 차이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모형 (3)에서 거시경제 변수가 통제되자 체제전환 국의 대인 신뢰 비율은 그 밖의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전환국 중 경제적 수준은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높은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모형 (4)에서 체제전환 이후와의 교호항을 추가했을 때 음(-)의 계수 값이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요컨대 사회적 신뢰는 고소득

국가에서 높은 경향이 있지만, 경제적 수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대인 신뢰 비율과 행복도 사이에 선형의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림에서와 같은 비선형의 곡선 모양의 관계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20% 이하의 매우 낮은 대인 신뢰 비율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 도 행복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경우가 있어 처음에는 사회적 신뢰와 행복도 간에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인 신뢰 비율이 20%대를 넘어선 수준에서는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한 경향이 발 견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행복감이 체제전환 전보다 감소 했고, 시장경제적인 인센티브, 민영화, 자기책임에 대한 지지도 역시 감 소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으며, 군대를 제외하고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신뢰 역시 하락하여, 언론, TV, 노조, 경찰, 종교기관, 정당, 의회, 공공서비스, 기업에 대한 신뢰도 감소하였다. 반면, 시민 참여와 책 무성은 높아졌으나, 정치적 안정성은 크게 하락했고, 법치, 정부의 효과 성, 규제의 질도 낮아졌다. 그럼에도 부패 관리는 개선된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이와 함께 체제전환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 상승에 따른 행복감의 궤적은 U자형(또는 스마일 입모양)인데, 나이에 관한 2차 함수 형태로 추정된 계수값으로 계산해보면 젊어서 높던 행복감이 50대 중반(56세 무렵)에 최저가 되고 그 후 다시 상승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행복했고,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미혼보다 행복하고, 미혼이 이혼·별거·사별보다는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며, 실업자는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학생·주부·은퇴자)보다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또한 주목했던 체제전환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 관련 해서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는 주민들의 안정감과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체제전 환국에서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의 통제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언뜻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정부, 질이 높은 규제, 부패의 관리는 유능하고 합리적이며 청렴한 정부를 의미하기에 주 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정부가 체제전환국의 정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제전 환 과정에서 정부가 기능적으로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거버넌스 지표 측면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기득권의 균열 속에 개인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빈틈이 열리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주민들의 행복감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